

“수도권 골퍼 유치”

전남도 공격 마케팅 나서

전남도가 수도권 골퍼 수요를 유치하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18일 오후 도청에서 도내에 운영중이거나 공사중인 골프장 업체 임원, 식음료·특산품업체 대표, 전문 교수, 관련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골프·레저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예상되는 골퍼장 과잉공급으로 인한 경영수지 적자에 대비해 수도권 골퍼를 적극 유치하기로 하고 남도의 특색있는 여건을 활용한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전국 초·고·대학생 골프대회, 시니어 골프대회, 최경주·신지애 등 전남출신 유명 프로 초청 골프대회, KPGA·KLPGA 대회 등 전국 규모 이상의 이벤트 골프대회를 적극 유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무안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중국·일본 등 동남아 골퍼여행객 유치, 따뜻한 기후조건과 수도권에 비해 저렴한 사육료 등 집중 홍보, 배수구 등에 전통 어종 입식과 한옥 건축물 건립 등 웰빙·친환경 골프장 설치, 전남지역 생산 식음료 및 농수산물 이용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나주 오리농장 시 정밀검사 내일 발표

영암서 또 시 의심 신고...전남지역 19곳으로 늘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전남지역에서 또다시 AI 의심신고 1건이 접수됐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영암군 신북면의 1만여 마리를 키우는 오리 농장에서 30여마리가 집단 폐사한 것으로 신고됐다.

도는 이 농장에 대한 축산기술연구소의 간이검사 결과 AI 음성으로 나타났지만 이날 오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이 농장은 전남에서 AI 첫 발생지인 영암 신북의 농장과 경계지역 안에 있는 곳으로서 이미 이동제한 조치가 취해진 상태다.

이로써 전남지역에서 집단폐사 등 AI 의심신고와 자체 의뢰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정밀검사를 벌이고 있는 곳은 모두 19곳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닭과 오리농장의 최대 사육지역인 나주 산포·공산지역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가 20일께 발표될 예정이어서 이 시기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현재 정밀검사 중인 곳은 이번엔 신고된 영암 신북을 포함해 영암 6곳, 나주 6곳, 무안 2곳, 함평·여수·화순·구례·목포 각 1곳 등이다.

도는 또 고병원성 AI 발생지인 전북 순창

의 농장을 출입했던 사료운반 차량이 왕래한 전남지역 13개 농장 가운데 구례와 함평 등 3곳에 대한 간이형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농장에 대해서도 현재 검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재 전남지역 닭·오리 살처분은 36개 농가와 1업체의 74만8천마리, 종란 137만7천개로 집계됐으며 이 중 20개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 7억9천200만원이 지급됐다.

이와 함께 박준영 전남지사는 이날 300마리 이상의 닭·오리를 키우는 1천300여 농가에 서한을 보내 AI 의심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신고 및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오리·닭 소비 촉진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남해안권 8개 지자체 “여수 엑스포 성공 협력하자”

여수시와 광양·진주·사천시, 구례·보성·고흥·하동군 등 남해안권 8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장단 13명이 18일 여수시청에서 모임을 갖고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들 8개 시·군은 이날 과감하기로 실무협의회 구성에 합의했다.

/여수=박양규기자jyark@kwangju.co.kr

“북핵 검증 이전

대북 제재 해제”

라이스 美 국무부 밝혀

콜롬비아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17일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내역을 검증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국은 검증이 끝나기 전에 대북제재 가운데 일부를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스 장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핵 6자회담의 진전에 대해 평가하면서 “북한이 실질적으로 그들의 의무를 이행한다면 미국은 대북제재 가운데 일부를 해제할 것”이라고 말해 북한이 절기차게 요구해온 테러지원금 명단 삭제 및 적성국 교역 금지법 적용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과 북한은 앞서 6자회담 ‘2·13합의’와 ‘10·3 공동선언’에서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신고하면 테러지원금 명단 삭제 및 적성국 교역금지법 적용해제 절차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라이스 장관은 그러나 미국이 북한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제재조치들이 많아서 일부 제재해제 조치를 취하더라도 다자, 양자 차원의 다양한 제재조항들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스 장관은 특히 북핵 검증이 완료되기 전에 테러지원금 명단 삭제 등 북한이 원하는 제재해제가 가능하다는 질문에 “검증은 시간이 좀 걸리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적절한 검증수단을 갖고 있는냐는 것”이라고 밝혀, 검증 완료전 일부 제재 해제 가능성을 내비쳤다.

/연합뉴스

완도 수목원, 세계적 난대 수목원 된다

식물자원 보존·증식 연구 등 국가에서 직접 운영

박준영 도지사-산림청 ‘협약’

전남도 완도수목원이 세계적인 난대수목원으로 거듭난다.

전남도는 18일 오후 전남도청에서 박준영 도지사와 하영제 산림청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완도수목원을 세계적 난대수목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산림청이 직접 운영토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완도군 군외면 대문리에 위치한 수목원

은 불가시나무, 녹나무, 감탕나무, 황칠나무 등 난대 희귀수종 750여종과 3천857종의 다양한 식물자원, 그리고 빼어난 자연 경관을 보유하고 인연인 5만~6만여명의 방문객이 찾는 곳이다.

산림청은 그동안 광릉 국립수목원이 역사적·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연구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제2국립수목원 건립이 절실, 기후·식생에 적합한 대상지를 물색해왔다.

이런 가운데 박준영 지사가 완도수목원

을 국가에서 직접 운영토록 산림청에 건의했고 산림청도 완도수목원의 난대식물 자원의 체계적 보존·증식과 연구를 위해 국가운영의 필요성을 인정, 실무협의를 통해 협약을 맺게 된 것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산림청은 올해부터 2년간 연차적으로 완도수목원과 그 재산에 상응하는 전남도 관내의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상호 교환하고, 양 기관에서 수목원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행·재정·기술적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이에 따라 향후 남부지역과 난대기후대의 국가식물자원 보존·증식기반을 확충하고, 난대식물유전자원에 대한 활성화 및 체계적인 연구활동이 보다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농업용 면세유 등 조세 감면 축소되거나

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모든 稅 감면 원점 재검토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모든 조세 감면제도를 원점에서 점검해 정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2008년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통해 경기회복과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율 등을 낮추는 한편, 모든 감면제도를 재검토해 국

제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 축소나 폐지하기로 했다.

재검토 대상은 전체 219개 비교세,감면제도이며 지난해 말 기준 감면규모는 22조7천억원에 달한다.

중점 검토 대상은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등 34개)과 ▲

시행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제도(연구개발 특구 입주 첨단기업 조세감면 등 35개) ▲감면규모가 연간 1천억원을 상회하는 감면(농어업 면세유,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24개) 등이다.

다만 정부는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부분인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당정, 추경 편성 싸고 ‘정면 충돌’

강만수 “경기부양 위해 필요”

이한구 “감세 통해 내수 진작”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를 논의했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한승수 국무총리 및 각부 장관, 류유익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이날 총리 공관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날 15조3천억원에 달하는 세계잉여금 중 국가채무 상환과 지방교부세 등에 필요한 재원을 제외한 4조8천여억원을 활용, 추경을 편성할 것을 요청했으나, 한나라당은 추경 편성에 반대하는 대신 잉여금을 활용한 감

세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고 내수 부진 현상과 고용 부진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좋지 않다”면서 “내수 진작을 위해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추경편성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정부는 작고 알뜰한 정부를 주창하고 있다”면서 “모든 경제정책은 단기적 안목에서 수립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을 갖고 수립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 감세를 통해 내수를 진작토록 하고 세계 잉여금도 국가채무를 더 갚는데 써서 금리 인하를 통해 내수를 진작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시 설

혁신도시 정부 보완책 발전적 방안돼야

정부가 혁신도시를 계속 추진키로 했으나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중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혁신도시 재검토는 없다”고 말했다고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재검토설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비수도권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자 정부와 여당이 뒤늦게 진화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혁신도시가 변경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정부는 혁신도시를 특정 산업의 전후방 연관체계를 갖춘 ‘산업클러스터(산업집적도시)’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식이 됐든 참여정부의 당초 구상은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공기업의 민영화나 통폐합도 걸림돌이다. 민영화 및 통폐합이 추진되면 한전이 이전토록 돼 있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민영화 대상인 공기업에 이전을 강

요할 수 없고 공기업 이전 없는 혁신도시의 검토가만 남게 된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와 여당이 혁신도시를 재검토하지 않겠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더구나 정부는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수도권 ‘지방 죽이기’나 다름없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공기업의 민영화 문제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규제 완화와 민영화 추진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책이 불가피하다면 대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혁신도시는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정부가 재검토는 없다고 한 만큼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는 혁신도시의 보완책은 혁신도시를 살리려는 발전적 방안이어야 한다.

미 쇠고기 협상 타결 축산농 피해 최소화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조만간 미국산 LA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가 수입된다. 정부는 18일 미국과 발원 협상 끝에 ‘뼈 있는 쇠고기’까지 수입하고 현행 ‘30개월 미만’ 연령제한도 미국 측의 동물사료 금지 강화 조치가 시작되는 시점에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개월 안에 LA갈비 등 뼈 붙은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 식탁에 오를 전망이다.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은 정부가 ‘연령 30개월 이상 뼈 있는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 포기’라는 미국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벌써부터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해 쇠고기 개방을 일방적으로 양보했다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도 국내 축산농가는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사료 값이 1년 새 배 가까이 폭등한 상황에서 값싼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까지 개방

돼 한우 농가의 줄도산 사태마저 우려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통제국 판정을 받았다고 하지만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미국 내에서조차 최근 광우병 사망자가 나오는 등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미국 측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줬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미 쇠고기 협상을 서두른 것은 너무 성급했다. 미 의회가 쇠고기 협상 타결을 계기로 FTA 비준을 해준다는 보장도 없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안전성도 논란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쇠고기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양보한 것은 한참 잘못됐다.

정부는 미 쇠고기 수입 확대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한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광우병 안전 강화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이다.

목포신항, 기아 수출차 나흘째 하역 중단

기아차·목포시·항만청 물밑접촉...해결책 기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생산된 수출차량에 대한 목포신항의 하역중단 사태가 18일도 나흘째를 맞았으나 아직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하역중단 사태이후 목포시는 목포신항 재정부무를 자동차 전용부두로 지정하되 부족한 자동차 야적장은 대한통운, 세방, 동방 등 하역 3사가 신항 배후단지 안에 개설한다는 방안을 도출해냈다.

그러나 기아차는 5천600대를 동시에 야적할 수 있는 10만7천250㎡(3만2천500평)의 땅이 당장 확보되는 않으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또 야적장이 2~3곳으로 분산되면 또 다른 물류 지연 사태가 발생하고 특히 부족한 야적장의 경우 현재 맨땅으로 포장 공사를 새로 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사용할 수도 없어 하루 반입되는 700대의 수출차 물량을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기아차는 따라서 당분간 경기도 평택항, 전북 군산항, 전남 광양항 등 타지 항구의 이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일관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결국 수출항을 바꿀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ee@kwangju.co.kr

/목포=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기름 피해’ 해수욕장 절반 올 여름 개장 불투명

전남 서남해 지역은 분석중

허베이스파리트호의 기름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해수욕장의 절반 가량은 아직도 개장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유류 오염지역의 어패류에 대한 인체 유해성은 구름포 지역의 굴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가 유류 오염 피해를 입은 28

개 해수욕장의 모래를 지난해 12월부터 3월까지 조사한 결과 전체의 46%인 13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

기준치를 넘어선 해수욕장은 구례포, 신두리, 신노루, 구름포, 천리로, 방죽포, 모항항, 어은돌, 파도로, 청도대, 빗개, 꽃지 등이다.

한편 타르 피해를 입은 전남 서남해안 지역에 대한 조사(2월16일~3월11일) 결과는 현재 분석 중에 있다.

/연합뉴스

빛의만평

- 김중두



이쪽이 더 시급할 것 같은데...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www.kwangju.co.kr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업간1			
대표전화 2200-551		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경영지원국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사회1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경정지원국		2200-511	문화보육국
<F A X>		222-8005	<F A X>
광고매점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F A X>		227-9500	<F A X>
다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